

## 민주연구원 “이재명정부 가족정책의 방향과 과제” 정책브리핑 발간

-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(원장 이재영)은 5월 4일(월), “이재명정부 가족정책의 방향과 과제” 정책브리핑을 발간했다.
  - 이재영 원장은 “가정의달 5월을 맞아 이재명정부의 주요 가족정책 방향과 향후 과제를 정리하는 브리핑을 발간했다”라고 설명하며, “가족정책은 양육 부담과 자녀 발달, 여성의 노동시장 복귀 등 가정의 다양한 어려움을 사회가 분담해 가구 내 위험이 빈곤, 고립, 젠더 불평등, 아동 발달 격차 등 사회적 문제로 확대되는 것을 예방하는 의미가 있다”라고 밝혔다. 이어 “이번 정책브리핑은 가족정책의 의미와 중요성, 가족정책의 국제적 동향, 이재명정부 주요 가족정책의 내용, 향후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다”라고 설명했다.
  
- 이번 정책브리핑은 가족정책의 국제적 동향, 이재명정부 주요 가족정책, 향후 과제를 다루었다.
  - 첫째, 이미 가족정책은 국제적으로 ① 단순한 출산 장려를 넘어 **일·생활·가족의 균형을 위한 종합 정책**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특히 ② 종래의 아동수당·가족급여 등 수당성 지원에 국한되지 않고 영유아 **교육·보육(ECEC)** 등 서비스 투자가 강화되고 있다. 빈곤·위기 아동에 대해서도 유럽의 아동보장제도와 같이 필요한 서비스를 패키지로 충족시켜주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. ③ 또한 ‘**같이 돌보고 같이 일하는 사회**’를 구현하기 위해 출산·육아휴직을 어머니의 제도에서 아버지도 쓰는 제도, 아버지에게 양도불가능한 권리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나아가고 있다. ④ 한부모, 비동거부모, 입양가족, 1인가구 등 **다양한 가족 형태를 지원하는** 방향으로 전환 중이다.
  
  - 둘째, 이재명정부 주요 가족정책을 ‘123대 국정과제’와 ‘제5차 건강가정기본계획(안)’을

통해 살펴보았다. 123대 국정과제의 주요 가족정책으로 ① 경제적 지원 관련, 아동수당 확대와 우리아이자립펀드 신설이 추진 중이며, 우리아이자립펀드는 더불어민주당의 '26 지방선거 공약이기도 하다. ② 영유아 교육·보육서비스 강화를 위해 난임·임산부·영유아 지원을 위한 30만 이상 지자체 공공산후조리원 의무화,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강화, 정부책임형 유보통합과 틈새돌봄, 온동네 초등돌봄이 추진 중이다 ③ 위기·취약아동 지원은 기존 수당 지원에 더해 맞춤형 서비스, 사례관리가 강화되고 있다 ④ 일·생활·가정 균형과 여성 경제활동 지원을 위해 다양한 (배우자) 휴가제도 확대와 자동육아휴직제도 도입, 고용평등임금공시제 도입 등이 추진 중이다 ⑤ 한부모, 조손, 장애, 청소년부모 가구 등 취약한 가족 지원과 1인가구를 위한 사회적 고립 대응, 생애주기별 외로움 정책 등이 추진 중이다.

- 셋째, 제5차 건강가정기본계획(안)을 통해서도 포용적 가족문화 조성, 가족의 기본생활 보장, 사회적 돌봄인프라 확충, 일·생활·가족의 균형 성장이 주요 전략으로 제시되고 있다. 이러한 점에서 이재명정부 가족정책은 일·생활·가족 균형, 서비스 지원 강화, 출산기 유연근무 및 일하는 방식 조정과 경력복귀여성 지원, 다양한 가족 형태 지원을 포함하고 있어 가족정책의 국제적 추세와 흐름을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.
  - 넷째, 저출산·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, 다문화사회로의 진입, AX전환과 일자리 불안정성 증대 등 급격하게 변화하는 사회환경 속에 가족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고 고도화하기 위한 향후 과제를 제시했다. ① 아동수당·가족급여의 지급 기간과 수준을 생애주기별 가구 지출구조에 맞게 재설계하고 중앙·지자체의 지급을 효율화·내실화하는 동시에 지역 간 격차를 완화하는 방향이 필요하다. ②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률 제고를 위한 종합적 대책과 일하는 시간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는 '일하는 방식의 전환'이 필요하다. ③ 경력보유여성의 노동시장 복귀를 강화하기 위한 새일센터의 기능·역할 고도화와 ④ 이주배경가정 학생 지원과 사례 관리를 위한 종합 대책의 필요성을 지적했다.
- 민주연구원 신영민 연구위원은 “가족정책은 인구구조와 미래환경의 급격한 변화를 감안하면 날이 갈수록 중요해지는 정책 영역이며, 현재 가족정책의 방향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주요 과제를 내실화해 가정 부담의 틈새와 사각지대를 메우는 일이 필요하다”라고 덧붙였다.